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2010.10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머리말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한일신시대 공동연구는 2009년 2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의 공동연구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일관계의 100년 대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신시대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문명사학자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한일 양국이 맞이한 21세기는 단순한 20세기의 연속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야 할 복합의 세기입니다. 이제까지의 한일관련 논의들이 과거중심 또는 미래중심의 한쪽 시각에서 이뤄졌다면 이 보고서는 과거속의 미래, 그리고 미래속의 과거를 동시에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역사적 멍에를 어깨에 걸머지고서도 지평선 너머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한일 간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만 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신시대에 떠오르는 신질서의 모습입니다. 동양의 전통 천하질서는 19세기 중반 본격적으로 서양의 근대국제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역사의 주인공, 무대, 그리고 연기의 내용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1세기 신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질서는 다시 한 번 역사적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안보와 번영의 무대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이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복합네트워크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부국강병과 같은 생존전략만으로는 21세기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복합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 공간을 함께 품고, 전통적인 안보와 번영의 무대와 더불어 새롭게 부상한 환경, 문화, 정보지식 무대에서 경쟁하고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은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복합 공생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야만 합니다.

공동연구의 한일관계, 국제경제, 국제정치의 세 분과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과 일본이 과거 백 년 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미래 백년 설계에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한일 양국의 국가 지식을 모으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질서
구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도와주신 양국 정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일한문화교류기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0년 10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위원장 하영선

일한 신시대 위원장 오코노기 마사오

목 차

기본구상.....	1
한일 신시대 아젠다 21	5
Ⅰ. 한일관계.....	6
Ⅱ. 국제정치.....	13
Ⅲ. 국제경제.....	20

기본구상

I. 「한일 신시대」의 도래

한일 양국은 20세기 전반의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고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 전개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신뢰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공동노력에 의해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한일 신시대는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이다.

한일 양국은 과거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현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미래를 공동 설계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유기적이며 연속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공간적으로 한일의 양국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한 질서를 복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민주주의, 성숙한 사회·경제체제, 그리고 개발, 환경, 인간안전보장, 평화구축 등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 공헌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 활력이 넘치는 사회, 창의적인 문화를 높게 평가한다. 이러한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상호 평가 및 상호 존중의 정신은 신시대 한일 관계의 공고한 토대가 된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의 지배, 인권을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평, 분배, 환경, 복지 등 포스트 산업화 사회의 가치를 통합하는 새로운 질서나 제도를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실현시켜야 할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II. 한일 관계 100년의 성찰

한일 양국은 한국병합조약 100년이라는 역사적 해를 맞이하여, 한반도와 일본에 사는 2억 인의 새로운 100년을 시야에 넣은 미래를 공동설계하기 위해 과거 100년의 역사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반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하였다. 그러한 식민화 과정 및 이후의 식민지배가 가져온 수많은 손해와 고통 및 민족적 한이 1945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한일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여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억에 새기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일관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비구미 지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 다원적 사회문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로서 평가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식민·피식민 관계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지만 긴밀한 정치경제 협력을 통해서 대등한 파트너로 발전한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양국 관계이다.

냉전종결 이후에 빈번히 일어난 역사 마찰은 과거회귀적인 패러다임에서는 탈피했지만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과도기의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혼란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곤란하지만 양국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냉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해결을 꾀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는 한일 양국의 정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 생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구축해 한일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영을 도모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상이다.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면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는 한일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자본, 정보, 기술 및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일 공동시장이 실현되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전진이 시작될 것이다.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 생태 영역에서도 한일 양국의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일양국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범과 가치, 그리고 제도와 관행 등의 국제 공공재를 공동으로 창출해야 한다.

IV. 한일관계의 미래구상

21세기 신시대는 더 이상 냉전 시기의 양극화나 탈냉전 시기의 다극화 시대가 아닌 복합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냉전적 사고나 탈냉전적 사고를 넘은, 신시대의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21세기 한일 양국의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대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미 동맹의 발전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며 한미일의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는 한일관계의 굳건한 토대이다.

한편, 한일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일 3국 협력의 틀은 한일 공생 복합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한일 양국은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국제규범, 제도와 관행에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합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북한문제의 해결은 양국이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일양국은 핵개발이나 납치 등의 핵심적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뿐 아니라, 보다 한 걸음 나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V.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 2010」의 채택

한국병합 100년이라는 역사적 해를 맞아 한일 양국의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하여 불행한 과거 역사를 직시·성찰하는 한편, 신시대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그 공동선언에 본 보고서의 제언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한일신시대 아젠다 21

한일 관계

- 역사문제 노력
- 고위급 대인외 활동
- 교육 네트워크 다중화
- 캠퍼스 아시아 실현
- 동아시아 지식은행
- 멀티미디어 협력
- 애저티널 추진

국제 정치

- 공생 복합 네트워크 강화
- 대북 정책 공조
- 인선 보장 협력의 강화
- 신아시아 질서 공동구축
- 지구적 인본 협력
- 에너지 환경 협력
- 클론법 거버넌스 협력

국제 경제

- 공생 번영 네트워크 구축 연구
- 포괄적 FTA 체결
- 금융질서 안정화 협력
- 금융질서 정거발전 협력
- 정보통신 협력
- 개발협력
- 한경사업 기민화대

I. 한일관계

1. 역사문제를 위한 새로운 노력

한일신시대는 과거와 단절되거나 과거를 망각하는 시대가 아니다. 한일양국은 불행했던 과거의 한 시기를 직시하면서,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체제, 공통의 이념과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돌이켜보면 과거의 역사에 관한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양국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탈냉전·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1990년 이후의 한일관계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전개가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수상은 1993년 11월 경주에서, 텔레비전으로도 중계되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창씨개명, 위안부, 징용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을 주었던 것을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직접 언급했으며,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1995년)과 오부치 게이조 수상(1998년)은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정부도 이를 일정 부분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칸 나오토 수상이 “그 의지에 반해 행해진 식민지배”에 의해 한국인들이 “국가와 나라와 문화를 빼앗겼고 민족의 긍지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다시금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또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반환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의 지속적인 실시와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 의궤 등의 인도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명했다. 이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일본 정상의 담화와 그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은 공히 양국의 국내정치의 미묘한 균형상태 위에 성립된 것이었다. 과거에도 양국 지도자가 진일보한 자세를 보일 때마다 그에 반대하는 국내 정치세력의 강한 반발이 표면화하여 한층 더 논쟁을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한일 간의 역사마찰은, 지배·피지배의 기억에만 집착하는 과거회귀적인 발상에 의해서도, 또한 미래의 밝은 협력만을 강조하는 접근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다.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상호교류로 다져진 한일관계의 토대 위에서 해소되어야만 할 것이며 양국정부는 역사마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것이 한일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양국의 뜻 있는 시민·학생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양국 교원의 상호방문, 토론, 연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도 학교 간 자매결연의 확대를 장려하고 수학여행 등의 기회를 이용한 학생들의 상호방문 기회를 확충한다.

2.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나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화, 북한의 핵개발에 의해 표면화된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동아시아 공생을 위한 지역질서의 구축이라는 과제는 글로벌 국가로서 성장한 한국과 일본에게 능동적인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서툰 형식으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외교, 국방, 경제, 환경 등 각 영역마다 각료급 회의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최근 몇 년 간에는 한일 간 뿐 아니라 한중일 3국간에서도 정상회담이나 영역별 각료회의, 외무 차관급 전략대화 등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2008년부터 정례화 되었다.

신시대의 한일관계는 이러한 영역별 협력을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정보지식, 과학기술, 환경생태 등 영역을 가로 지르는 협조와 협력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심화시켜 가야 한다. 복수의 영역에 걸친 포괄적 이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양국 정상 및 관련 각료, 주요 정치가 등이 참가하는 고위급 대화의 수시 개최는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한일 양국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협력 추진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협력을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갈 수 있다. 또한 한일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는 것도 가능하다.

한일 신시대의 고위급 대화는 양국 간의 쟁점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글로벌한 영역의 협력분야에 걸친 쟁점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교류 네트워크의 다층화

한일 간 교류채널을 중층화하고 저변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각계 노·장·청의 광범위한 세대가 균형 있게 교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정치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양국 신진의원 간의 초당파적 정기교류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에서 합의된 것을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민간 주도의 전문가(연구자, 경제인, 관계 출신자 등) 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체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도 중요하다. 이미 100개가 넘는 자매도시 협정이나 제휴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2006년에 설립된 「부산-후쿠오카 포럼」과 같이 경제협력의 효과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초국경적 지역협력(지역 FTA를 포함)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나 영토문제 등으로 양국의 정치외교가 긴장되더라도 지방자치체 주도의 교류행사들은 중지, 연기,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국의 관과 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문화교류 행사는 실질적, 그리고 상징적 효과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풀뿌리 교류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방자치체, 공공단체에서 쌍방의 연결 기회, 인재와 언어 장벽의 관리, 정확한 정보제공, 오해의 조정, 재정 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청소년 교류는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젊은 층이 상대국을 대규모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충실화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양국은 청소년 교류 뿐 아니라, 양국의 중년세대 및 실버세대 교류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저출산·고령화, 연금, 의료, 간호, 고용, 환경, 젠더,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공통과제를 테마로 한 양국의 풀뿌리 교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비슷한 사회구조를 가진 양국의 국제적 논의가 국내적인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특정분야의 공통과제에 대한 학술공동연구, 공동 심포지엄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 「캠퍼스 아시아」의 실현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통해 양국 간에는 유학생이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확대되어 왔다. 현재 이러한 교류를 기본으로 상호 이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시도가 양국의 청소년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통신사나 연행사, 견수사(遣隨使)라는 역사적 전통을 상기하면서 한일 및 한일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 정부의 지원확대, 공공기금의 창설 등이 바람직하다.

냉전종결 후, 유럽 통합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된 배경 중 하나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가동된 에라스무스 프로젝트, 즉 유럽 각국의 대학 간의 학점교환 프로젝트가 진전되어 유럽적인 시야를 가진 젊은 지도층의 육성에 성공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들 청년 지식층이 유럽의 화해와 통합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본받고자 하는 아시아인의 이니셔티브는 2008년 5월, 일본의 후쿠다 수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에라스무스 프로젝트 구상을 밝힌 데서 시작한다. 그 이후 2009년 10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캠퍼스 아시아」구상이 논의 되어 2010년 봄에는 3개국의 대학, 산업계 및 행정 관계자가 동경에 모여 상호교류 추진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러나 3국간의 학생 교류는 한중 간에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이 중일 간이며 유감스럽게도 한일 간 교류는 한중의 1/4 내지 1/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점 교환 등의 미온적인 교류만으로는 그 숫자의 비약적 확대는 의문스럽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학생 교류를 해 온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아시아 3개국에 실제로 「캠퍼스 아시아」를 개설하여 한일중의 언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을 가르치는 코스를 설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3개국 캠퍼스 간에 커리큘럼을 조정하여 학점 교환보다 학생 자체의 대규모적인 교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캠퍼스의 조성이 곤란하다면 기존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조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학생 때부터 한일중의 하이브리드 교육을 받은 「캠퍼스 아시아」의 졸업생들은 연구 및 교육, 경제계, 중앙·지방 행정기관, NGO에서 아시아적인 시야를 가지고 활약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아시아 3국에

대해 배우고, 각각의 많은 친구를 만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동아시아 3국 관계의 장래에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5. 동아시아 지식은행 프로젝트

사상과 역사에 관한 지식의 공유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 나가는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협력증진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간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 역사를 비롯하여 윤리, 문화, 사상 등에 관한 지식의 공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출판인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출판인 회의는 동아시아의 현대 고전 100선을 발표하여 상호 번역 사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일부 대학과 연구소는 동아시아 관련서적을 잇달아 발간하거나, 동아시아에서 공유해야 할 외교 사료를 모은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국가를 넘어선 인식공유를 위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동아시아에서 인식공동체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양국 관계나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동아시아 지식은행」(East Asian Knowledge Bank)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한일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지식은행」은 한일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근현대사 사료, 조약·선언·연설 등의 정치·외교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한일 및 동아시아 공생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는 동양의 우수한 사상서나 역사서를 적극적으로 번역·소개한다. 이를 통해 한일 및 동아시아 각국의 국민이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통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6. 멀티미디어 협력의 활발한 추진과 전면적인 문화개방

유럽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 간 합의로 설치된 독불 공동의 텔레비전 방송인 ARTE(아르테)라는 문화·교양 전문 TV 채널의 역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에도 공공 방송이 운영하는 문화·교양 전문 TV 채널을 공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한일 간 방송사와 신문사 등 매스미디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다큐멘터리, 특집기사, 영화, 드라마, 음반 등 제작이 보다 용이하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문화교류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자국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한국은 199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였고 일본은 한국의 드라마 등 문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 서는 한류 열풍이 또 한국에서는 일본문화의 저변확대 현상이 초래되었다. 한일양국은 향후에도 한일 간 문화교류의 폭이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2004년 제4차 문화개방 조치에 이어 향후 일본의 대중문화의 전면개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영화와 대중음악 분야는 상대국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이 분야의 제작과 발신, 홍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규모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의 경우 회원국 다수가 참가하는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 등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회원국 간의 상호 이해도 심화시키고, 음반 산업의 규모도 키우고 있다. 한일 간, 나아가 한일중 간에도 동아시아 규모의 영화제, 혹은 가요제 등을 신설하여 문화매체를 통한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아울러 영화산업과 음반 산업의 규모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국제 스포츠는 한편으로는 내셔널리즘을 고양하는 경쟁의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참가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제전이 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에는 최근 야구와 축구, 농구와 배구, 골프와 바둑 등의 프로 스포츠 및 게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미 바둑과 골프 등에서는 자국의 국경을 넘는 대회들이 창설되어 서로의 실력을 경쟁하기도 하면서 우의를 증진하는 제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살려 다른 종목의 프로 스포츠에서도 국내 리그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리그를 창설하여, 각국 간 실력을 경쟁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제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7. 한일해저터널 구상의 장기적 추진

도버해협을 잇는 영불 해저터널은 영불 간의 인적흐름과 물류 확대는 물론이고 섬나라인 영국과 유럽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타큐슈 지방과 부산·마산지역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은 한일 간의 인적 흐름과 물류의

확대에 공헌할 뿐 아니라 섬나라인 일본과 아시아대륙 전체를 잇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한일의 대중교류의 현황이나 한중일 3국 교류의 전망에서 보더라도 이 계획이 가지는 경제외적 상호교류의 효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우선, 한일 해저터널은 한일 양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심양까지 이어진다면 한일중 3국의 동북아 철도망이 이어지는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역대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시사한 바 있었다. 한국 측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방문 시 국회연설에서 터널을 언급하고 가이후 총리에게 건설을 제의한 바가 있으며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며 터널 건설을 제창하였다. 2003년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터널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다케시타 노보루 전 수상이 터널추진의 검토를 제시한 바 있으며 하타 츠토무 전 수상도 「일본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모리 전 수상은 2000년 10월 아셈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터널을 만들어 아셈철도로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칸 나오토 수상은 수상취임 전에 “한일 해저터널에 리니어 모터카를 달리게 한다”는 구상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해저터널의 건설은 거액의 금융지원과 선진적인 터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미래지향 프로젝트다. 한일 양국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터널건설을 위한 통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하여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은 물론 동아시아 안전보장이나 지역통합에 미치는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기술적인 건설 가능성 및 루트 설정, 여객·컨테이너·자동차 유통에 의한 물류 수송 체제의 변화, 건설비용, 상환계획 등에 관한 한일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분야에서 한일 간의 인적, 경제적, 기술적 교류가 현저히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거쳐 양국 지도자는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국제정치

1. 동아시아 공생 복합 네트워크의 강화

동아시아에서 한일 양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평화, 안전,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질서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동아시아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온 역동적인 지역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발하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는 과거 미소가 군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대결했던 냉전 구도를 탈피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불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다. 미중 양국은 한편으로는 강한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불확실 요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나, 대만 해협의 무력 분쟁 가능성도 동아시아의 잠재적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과 협력을 위해 핵심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웃나라면서 유구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환영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역할도 기대한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 관계를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평화와 발전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공생을 목표로 하는 복합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강화해, 장기적 목표로서 개방적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한다.

공생 복합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글로벌인 국제 질서의 개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의 세계화는 민주화의 확대나 시장 경제의 보급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및 대규모 자연재해 등 초국경적인 과제를 낳았다. 신흥국의 대두 역시 국제 정치 및 국제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의 공생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은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지역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의 사이에 협조적인 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공헌할 수 있다.

2. 북핵 및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내걸고 핵개발을 진행하

고 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자세는 한일 양국이 추구하는 공생을 위한 북합 네트워크의 미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자 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북한이 일체의 핵무기 및 미사일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도록 한일 양국은 정보를 교환하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핵포기 과정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일 양국은 북한이 동아시아 공생 북합 네트워크에 참가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문제가 되는 납치자 및 중거리핵미사일의 위협, 한국의 경우 2010년 3월에 북한 천안함 공격을 시작으로 하는 북한의 무력 공격 가능성과 한국인의 납치·이산 가족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이들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협력한다. 양국은 그간 한일과 북한 간의 합의 및 6자회담에서의 합의 등에 의거하여, 남북 간 평화적 교류, 한반도의 비핵화, 일본의 비핵 3 원칙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한일 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정책을 조정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한일 협력을 전제로 한미일 삼국 협력 관계를 한층 더 활성화시키는 한편,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6자 회담을 활성화하고, 2005년 9.19 공동 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6자회담을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국간 안보 협의의 장소로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한일 양국은 북한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하는 공동 인식을 가지고, 북한의 핵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경제적 지원,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 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한일 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계획을 폐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공유한다. 한국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일본은 남북 협력 관계의 확대 및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환영하고 각각의 과정을 통해 양국은 긴밀히 제휴하고 협력한다.

3. 한미, 미일 동맹과 한일 안전 보장 협력의 강화와 발전

한일 양국은 각자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향후에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

해 중요하다라는 점에 주목한다. 향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한미일 3국간 인식을 공유하며 안보 협력의 확대를 추진한다. 21 세기의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과거의 동맹과 달리, 특정의 적국을 상정하지 않고 동아시아 공동의 군사 및 인간안보 위협에 대처해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로서 진화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대해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국방, 지역안보, 인간안보,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등에서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한일 양국은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2009년 4월 23일 「한일 국방 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의해 합의된 고위 국방 관계자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뢰 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일 양국은, 19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이나 2009년의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 등을 통해, 각자 미국과의 동맹이 양국의 평화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협력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지역에 안정적 효과를 갖도록, 주둔미군의 역할이나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있어서 한미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한일 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공생 복합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지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 협의와 협력은 어떠한 세력도 소외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북한, ASEAN,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대화 및 다국간 협력과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중국의 성장을 환영함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의견을 교환한다. 한중, 중일 관계에 있어서 신뢰 양성이나 지도자 교류를 진행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활성화시킨다.

한일 양국은 중국의 군사발전이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중국과 신뢰 양성 조치나 군비 관리 대화와 같은 안전보장 회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일 양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복합공생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이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와 이해를 공유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 발전하는데 함께 협력한다.

한일 양국은, 중국이 양국과의 공통의 인식에 기초하여 북핵 포기,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실현,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통일, 장기적으로 안정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요망한다.

한일 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양 질서에 대해 중국과의 대화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ASEAN 지역 포럼(ARF) 등의 다자안보기구를 활용해 평화적 대화 환경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면 인도양이나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운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이나 해상 안전을 위한 협력을 다국간 차원에서 추진해 가는 것이나, ARF 주최의 재해 대응 훈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일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이 에너지, 지구 환경 문제, 테러, 마약, 국제 범죄,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 질병, 재해 등 인간안보라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비정부 주체인 NGO, NPO등의 지역 내 국제 협력을 독려하고, 동아시아 NGO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광범위한 참가를 추진한다.

5. 지구적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는 예방 외교, 평화 구축,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 대책, 대규모 재해나 전염병 대책 등 새로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종합 안전 보장」을 제시하고, 안 보를 비군사적인 측면까지 확대해 왔다. ODA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 역시 유엔 평화유지 활동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신흥 원조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양국은 경험을 공유하고 폭넓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구체적인 협력 항목으로는 분쟁의 염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등에 의한 평화 구축, 분쟁 지역 재건 지원을 위한 국방 조직이나 문민 정부 조직, 민간의 우위성이 있는 부문에 관한 정보교환, 파견 임무에 대비한 평상시 공동 훈련이나 장비·보급의 공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예방 외교, 평화 구축, 인도 지원 등 분야에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정부 및 NGO, 교육기관 등에 설립한다. 한일 양국은 유엔 평화

구축 위원회 등 유엔의 안보 기능의 강화에 힘쓰고, 아시아에서 PKO 부대 훈련 협력 센터의 공동운영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포괄적 인간안보 분야의 협력을 검토한다. 대테러, 난민, 환경, 질병 및 전염병, 재해·재난 긴급 구조 활동이나 해양 불법 행위 및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의 확대를 도모한다. 한일 양국은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정보교환, 협력체제를 정비한다.

한일은 비핵정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비핵화를 향해 핵군축과 핵확산방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구인 NPT, IAEA, 원자력 공급 국회(NSG), CWC, BWC, 베르사유체제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협력을 심화시킨다. CTBT의 발효를 향해 관계국을 동원하고,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조약의 성립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강화,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한다.

6. 에너지 환경 분야의 한일 협력

한일 양국은 해외의 자원에 의존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해 온 국가로서 에너지·자원의 희소성,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은 원자력 산업·기술개발 등 협력을 진행시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는 기술을 세계적으로 보급시키도록 노력한다.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에 의해 세계 최대의 온실 가스 배출 국가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환경 분야에서 한중일 3국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환경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노력한다.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환경 정책 및 기술에 관한 협력을 추구하면서, ASEAN, APEC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각국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의 범위를 강화한다.

한일 양국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원자력이나 자연 에너지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적 보급을 위해 협력한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이용 촉진을 목표로 2009년 1월에 창립한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 기관 (IRENA)등에서도 협력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 클린 기술의 개발 등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어 강점을 살려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에너지 및 환경을 배려한 경제성장을 위해 21 세기의 프런티어로서 주목 받는 것이 해양 및 우주의 효과적인 이용이다. 한일은 해양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해양 자원 탐사, 남극, 북극해 지역 개발등의 분야에서 공동 조사, 우주 탐사 및 위성 개발, 발사 등 협력의 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은, 환경 분야의 협력을 지구 규모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 양국은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위해 협력하고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제를 확립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한일협력

21 세기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세계적 규모의 과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복합 네트워크의 발전과 다층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오늘날 글로벌 거버넌스는 미국을 선두로 하는 주요국의 리더십, 기존의 G8,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G20, 그리고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유엔 등, 다양한 영역과 다층적 수준에서 혼재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다층적인 거버넌스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양국은 견실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서양 세계와 비서양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로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일 양국은 다국간 회담이나 주요국과의 외교에서 다양한 국가의 이익을 집약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일은 유엔이나 브레튼우즈 체제, G8이나 G20라고 하는 현재의 주요한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보리나 G8, G20간 네트워크의 원활한 복합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정부간 조직으로서 협력적인 글로벌 메커니즘 확립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첫째, 한일 양국은 지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협력체제와 지구적 차원의 다자협력체제 간의 협력을 주도한다.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지역협력체인 ARF, ASEAN+3, EAS, APEC 등은 지구적 차원의 다자협력체들과 연결되어 역내 또는 세계 공통의 문제를 보다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한일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동

아시아, 동북아시아로 지칭되는 다양한 차원의 지역단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화와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둘째, 한일 양국은 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질병 및 보건, 마약, 재해, 개발협력 및 원조 등 인간안보 분야의 다자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의제설정, 규칙제정, 규범의 확산 등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셋째, 한일 양국은 국내 활동에 집중해 온 자국 NGO들이 한일 간의 상호교류나 세계 각국의 NGO들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촉진자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국은 고등 교육기관 등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립을 검토한다.

III. 국제경제

1. 동아시아 공생·번영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지적 공헌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존재감은 배가되고 있다. 위기에 따른 수출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커다란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이제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재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지역을 단위로 한 초국가적 산업축적과 국제분업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국가와 기업은 무역과 투자를 매개로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성장의 동학을 창출해 왔다. 특히 한국과 일본기업은 역내 존재하는 입지조건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와 함께 동아시아경제의 네트워크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시장주도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정부주도의 제도화 노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를 엮는 FTA도 제안되어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에서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은 한-일-중 3자간 연결이다. 역내 3대 경제대국이기도 한 이들 간의 제도적 연계가 결여된 까닭은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조정, 고용조정(특히 농업과 일부 제조업부문)의 비용이 큰 데 있기도 하지만 상호신뢰관계의 부족, 역외국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 요소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일중 3국은 이미 인구성장의 보너스기가 종료되었으며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역내시장의 안정적 확대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지역공공재로서 성격을 갖는 역내 경제네트워크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에 한일 양국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동아시아 공생·번영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한일 연구회의」를 조직, 체계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신사고에 기반한 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양국은 국민경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를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복합적으로

역어가는 발상에 기반하여 서로 공유하는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건설자(architect)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 핵심과제는 글로벌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복합된 자본주의의 플랫폼을 창조하는 일이다.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분배적 가치를 존중하고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막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공생과 변영의 네트워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에 동의하는 국가로 네트워크는 확산될 것이다.

이는 지역기구를 만들고 구성원을 결정한 후 그 제도가 담는 가치와 이념을 찾는 기존의 동아시아공동체 제안들과 대조를 이루는 전략이다. 지역의 범위와 구성원을 놓고 국가 간 정치적 마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유효한 전략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소수의 국가군을 찾고 이들이 네트워크의 플랫폼을 창조한 다음 이에 동의하는 국가 군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지리적으로 역외 국가이나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변영에 사활적 존재인 미국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연결의 대상이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신자본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창조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며, 한일 양국으로부터 동아시아로의 네트워크 확산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럼으로써 양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통합되고 기술과 생산의 혁신을 가져오며 인프라 및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역내 발전격차를 교정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창조에 지적 공헌을 할 수 있다.

2.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과 일본은 OECD 회원국으로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무역자유화를 넘어 동아시아 변영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포괄적 FTA협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제조업의 공정간 분업네트워크가 정교화 되는 가운데 한일 기업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양자 간에는 경쟁뿐만 아니라 긴밀한 분업과 협력의 관계도 구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일FTA는 양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무역네트워크를 구축, 심화하여 지역과 세계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의 발신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시장 개방은 양국의 공통 현안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에 대비하여 그 외연을 상호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표출된 양국의 높은 역외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아시아지역 전체로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출발점에 서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FTA의 체결 가능성을 높이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특성인 역내 국간 격차를 감안하여 민감한 부문의 개방 수준을 탄력적·점진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투명하고도 완성도 높은 자유화를 추구하는 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위험에 직면하는 한편, 제조업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열위에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양국은 인력이동의 자유화(서비스 모드 4의 개방)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격요건의 공통화와 인력이동이 수반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양국 간 전문가와 숙련노동시장의 통합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동아시아 역내국과의 노동시장 통합으로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은 FTA를 통해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투자, 상호인증 등 무역규범 분야에서 점증하는 양국 간 통상마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양국 기업간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역내 위상에 걸맞게 동아시아 통상거버넌스를 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양국은 동아시아 표준이 될 만한 고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실천함으로써 지적재산의 창조와 공유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 건전화, 소득분배율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 농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환율변동 등 대외변수에 대한 취약성 및 역외시장 의존성 경감 등 많은 공통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 양국의 공통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 양국에 실익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조응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칭 「한일구조기금(Korea-Japan Structural Fund)」의 설립을 제안한

다. 유럽연합(EU)은 경제통합 이후 국가별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역내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운용하고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한일 구조기금」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한일 FTA 체결 시 일정하게 경쟁법의 조화를 고려한 후, 한일구조기금을 시범실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동아시아 구조기금(EASF)」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한일 구조기금」설치는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외적으로는 한일 FTA가 역내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3. 역내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질서 안정을 위한 협력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일 양국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역내 금융질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

첫째는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을 위한 공조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스왑 체결과 각국의 금융시스템 감시 기능으로 구성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양자간 협약이던 CMI를 다자간 메카니즘 (CMIM)으로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IM 역시 초대형 금융위기 관리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위기 발생 시 체결국가가 CMI를 이용하려면 IMF링크(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 최초로 실시되기 위한 조건)가 중대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IMF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감시 기능과 공여조건(conditionality) 작성 작업을 수행할 독자적인 역내기구가 필요하다. 일단 역내 국가들은 경제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2011년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를 위한 첫발은 내디뎠으며 한일 양국은 이 기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회원국 경제에 대한 건전성 감시기능이 거시경제변수나 금융부문에 국한되어 외환부문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환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

와 함께 급격한 환율변동을 경험해 온 한국은 일본과 함께 ‘거시경제 점검 및 정책 협의(ERP)’를 강화함으로써 종합적 감시기능 작동하도록 주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CMIM 체제는 아시아 통화기금(AMF)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통화·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에서 독일이 EMF(Euro Monetary Fund)의 창설을 제창했듯이 한일 양국도 AMF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작금의 남유럽 재정위기 및 유로화 가치하락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재정 건전성 감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에는 2008년 일본은행과 한국은행이 체결한 원-엔 통화스왑 계약의 지속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 통화스왑이 세계금융위기 시 실제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외환시장에서 한국의 외환준비고가 감소될 경우 일본이 지원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되어 원화가치 폭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상호 거시경제 및 은행부문 건전성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기능 및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감시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4. 역내 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협력

한일 양국은 역내 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역내 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가 대표적인 예이다. ABMI는 ‘아시아 채권펀드(ABF) 이니셔티브’와 함께 채권시장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발행 주체의 다양화 등 많은 공헌을 해왔다. 2009년에는 신용보증투자기관(CGIM)이 설립되었고 ‘신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로드맵(New ABMI Roadmap)’도 채택되었다. 한일 양국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채권 발행자(기업)와 투자자가 실제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외환관리 및 국제자본거래의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역내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한일 양국의 선도적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일 양국의 실물경제는 달러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엔 환율도 변동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관광포함)뿐 아니라 직접투자 등 무역 전반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이는 양국의 환율이 양국경제의 기초조건보다 엔 캐리·트레이드 등 구미 금융

기관에 의한 양국 간 자본이동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일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원/엔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다면 쌍방의 기초조건을 어느 정도 반영한 실효 환율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장기과제로서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는 ASEAN+ 3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 한일양국은 이를 의제화하여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5.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양국은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공생네트워크의 구축에 공헌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는 국가 간 협력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표준 장악에 실패한 과거를 교훈삼아 적극적으로 표준경쟁에 나서고 있고, 한국 역시 자국 기술을 지역 또는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부상도 현저하다.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그간 세계 표준화 체제를 지배해온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직접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 있다.

이처럼 한일중 3국은 자국의 기술을 세계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나, 경합의 양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역외 세력의 세계표준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삼국간 협력에 의한 지역표준의 확보는 곧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동시에 지역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그 동안 한일 양국 및 한일중 3국 간에는 정보통신 일반 및 표준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이에 한일 양국은 첫째,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의 공동 개발 및 표준화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여 4세대(LTE: long term evolution 등) 국제 모바일 통신 분야 및 인터넷을 넘는 차세대 분야에서 공조를 추진하고, 둘째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대표적 융·복합 기술 및 사업의 표준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일 양국이 중국을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과 협

력하여 지역표준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및 세계시장의 확보에 나설 수 있다.

6. 개발협력을 위한 한일 공조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경제발전패턴, 급속한 산업화, 산업정책 등 정부와 제도의 역할을 중시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 원조수혜국으로서 성공체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조공여국으로 발전해 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이미 개발협력지원 및 기여외교 선진국으로 많은 국제적 공헌을 해 온 반면, 한국은 2010년 DAC 가입을 계기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는 단계에 있다. 일본이 선진 공여국이라면 한국은 후발 공여국이다. 한일 양국은 상호간 강점을 인식하고, 양자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공공모델을 찾아 국제 개발협력에 공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일 양국은 첫째, 기술협력·무상원조·유상원조의 세 부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보완성과 상승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원조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양국은 수원국에게 농업 및 중소기업 발전경험, 산업진흥정책 노하우를 전수함에 있어서 기술경영 연수나 커뮤니티 개발 등 기술협력과 인프라 지원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소자금 지원(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 등과 같은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 교육·공공위생 부문에서 한일 양국은 학교운영이나 직장환경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협력과 건설 및 인프라 개선 등 유무상 원조를 통한 하드웨어 협력을 결합할 수 있다. 재해분야에서도 인재육성, 방재투자, 긴급지원 등 3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양국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적응적 투자」에 주목하여 「그린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 온난화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열대병의 만연, 작물수확량 감소, 수물지역의 난민 속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발저항성이나 고온저항성이 있는 작물품종의 개발 등 기술협력과 방재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차관 공여를 결합해 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적응적 투자」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자원개발을 위한 한일 공동원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원투자는 노동자의 건강개선이나 교육지원, 주변 커뮤니티 개발 등과 폭넓게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발원조는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른바 BOP 비즈니스(Base of the Economic Pyramid, 연수입 3,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대상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정비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여 DAC 강령에 충실히 따르면서 민간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개발이념을 공유하는 한일정부는 협력을 통해서 국제연합 개혁, 국제금융기관(MDBs)의 제도개혁, OECD의 개발원조 위원회(DAC), G20 등에서 동아시아적 개발이념의 확산 등 국제개발의 제도개혁·설계에 적극적으로 관여, 정책연구를 지원하며, 지구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개발경험을 적극적으로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은 모두 원조의 분산도가 높으므로 집중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모두 주요 공여국이 되는 수원국에서는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비교우위 원칙에 따라 사업을 분업화해서 공여효과를 높이고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른 지원체계의 공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차 북한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상기 기술협력·무상원조·유상원조의 세 영역을 연계, 일체화함으로써 협조융자 및 관민협력(PPP) 등 양국간 원조체계(modality)를 공통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7. 환경사업의 기회확대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함께 동북아의 대기, 해양,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환경공동체」이다. 1999년부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2009년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10개 분야(환경교육, 대기변동, 생물 다양성, 황사, 오염관리, 순환형 사회(3R), 전기전자 기기 폐기물의 월경, 화학물자의 관리, 환경 거버넌스, 환경산업과 기술)에 대한 행동계획이 정리되어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진전을 가져왔다.

세계 금융위기 이래, 선진국들은 거의 동시에 환경중시 성장전략을 명확히 해왔으며 이는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연합 환경개혁(UNEP)은 2009년에

는 1.37조 달러였던 환경제품,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2020년에 2.74조 달러까지 증대할 것이라 보고 있다. 환경사업은 소 에너지형 가전이나 차세대 자동차, 주택 등의 소비수요, 수림·토양·물 환경보전이나 도시교통 등의 사회자본 정비, 배출권거래·전력 매입, 순환산업 등의 투자, 저탄소관련 기술개발 등 매우 폭넓은 복합 산업이다. 소비재 부분에서는 세계시장에서 한일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투자 사업이나 시스템 비즈니스 전체는 일본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앞서가고 있다. 향후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자연환경과 도시기반이 유사한 한일 양국의 시장이 통합된다면 환경산업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도시화율이 높고, 집합주택이 주류이며 높은 수준의 IT기반과 중앙집권적인 사회조직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환경 비즈니스에 필요한 가시화, 표준화가 비교적 진전되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시장이 통합된다면 집권성과 분권성, 실험과 시장화를 조화한 보완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규제나 기준인증, 또는 보조의 쌍방에서 정부의 관여가 크며, 민간 주도분야와는 그 성격이 다른 면도 있다. 환경기준과 규제완화로 기반을 갖추어 동시에 경제협력 틀에서 상호기준인증과 그린회계 등과 관련한 전문가의 자격 공용화, 벤처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나 투자지원정비, 환경교육의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잠재적 사업기회를 확대시키며 고용창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국 및 일본 측 위원회 명단

가. 한국 측 위원 명단(총 13인)

분과	이름	소속
위원장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간사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한일관계	김호섭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한일관계	박영준	국방대학교
한일관계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정치	이숙중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제정치	문홍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정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치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국제경제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제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경제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나. 일본 측 위원 명단(총 13인)

분과	이름	소속
위원장	小此木政夫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간사	西野純也	慶應義塾大学法学部准教授
국제정치	中西寛	京都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국제정치	田中明彦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教授
국제정치	村田晃嗣	同志社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국제정치	田所昌幸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국제경제	深川由起子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術院教授
국제경제	小川英治	一橋大学大学院商学研究科教授
국제경제	木村福成	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教授
국제경제	澤田康幸	東京大学大学院経済学研究科准教授
일한관계	添谷芳秀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일한관계	平岩俊司	関西学院大学国際学部教授
일한관계	小針進	静岡県立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